

# 2014년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

2014. 11

# 차 례

## I 거래활성화

1. 코넥스(KONEX)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
2.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하향
3. 주식워런트증권(ELW) LP 호가제출 규제 완화
4. 대체거래소(ATS) 1일 거래한도 상향

## II 영업환경 개선

5. 신용생명보험, 신용손해보험의 대출창구 취급 허용
6.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 완화 및 역외 연락사무소 설치 허용
7. 투자중개업자의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
8. 방카슈랑스 판매 25%를 완화
9.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
10.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 완화
11.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아웃소싱 제한 개선

## III 자금운영 여건 개선

12.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
13. 외화 자금차입 신고기준 금액 상향
14. 은행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단축
15.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

## IV 이중규제 해소 및 기타

16. 장외파생상품 관련 은행 이중규제 개선
17. 투자자예탁금의 예금보험료 면제
18.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
19. 대형 보험대리점 책임 부여
20. 보험사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

## 1. 코넥스(KONEX)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

### ☐ 현황

- 일반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함 (벤처캐피탈, 기관투자자, 엔젤투자자는 기본예탁금 면제)
  - \*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
- 일평균 거래량(42,156), 일평균 거래대금(317백만원)이 저조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('13.7월~'14.5월)
  - \* '14.8월 일평균 거래량 : 39,000

### ☐ 문제점

- 위험도가 높은 시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코넥스 시장 참여자에 대한 기본 예탁금이 높아 거래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
  - 하루 평균 거래대금인 3~4억원 수준인데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3억원이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음
- 거래가 되지 않아 사실상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추진을 재검토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실정임
- 투자경력, 전문지식, 자격증 등에 있어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예탁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

### ☐ 개선과제

- 일반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인하해 시장 활성화 요청
  - (현행) 3억원 → (개선) 1억원
- 투자경력, 투자 관련 자격증 등 정성적 진입기준을 별도 신설하여 보완한다면,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

## 2.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하향

### ☐ 현황

- 정부는 KOSPI200 옵션의 계약단위인 옵션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선물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인상('12.6월)
  - \*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조
- 개인투자자의 지나친 투기 억제, 파생상품시장의 통일성 유지 목적

### ☐ 문제점

- KOSPI200 옵션은 단일 상품기준으로 '00년부터 거래량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, 거래승수 인상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'13년에는 처음으로 2위를 기록함
-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
  - 2위('11년) → 3위('12년) → 8위('13년)
  - 세계순위('13년) : 미국, 인도, 중국, 브라질, 독일, 영국, 러시아, 한국, 일본 順
- 파생상품시장은 헤지와 차익거래 등을 통해 현물시장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생시장의 거래 감소는 현물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
- 옵션승수 인상으로 거래량 급감,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수익 감소, 시장 축소  
의 부작용이 커 '투기 잡으려다 투자자를 잃어버린 꼴'이 되었음

### ☐ 개선과제

- 옵션 거래승수를 예전 수준인 10만원으로 하향
  - 거래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필요
  - 개인 옵션 투자자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

### 3. 주식워런트증권(ELW<sup>1)</sup>) LP 호가제출 규제 완화

#### □ 현황

- ELW 시장은 소액 투자자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옵션투자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개설되었음('05.12월)
- 정부는 과도한 호가제출로 인한 가격왜곡과 비정상적인 시장과열 가능성을 방지하고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LP(유동성 공급자)의 호가제출을 제한('12년)
- 시장 스프레드(매수-매도 호가 간격)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에만, LP가 8~15% 수준으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
  - \*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, 동 시행세칙 제31조의 8

#### □ 문제점

- 시장 스프레드가 좁아져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. 그러나 현재 LP는 호가 스프레드가 8% 이상 벌어져야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가의 빈도가 줄고 거래대금도 급격히 감소되었음
-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으며 ELW 시장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음
  - 일평균 거래대금 : 1조6374억원('10년) → 1169억원('13년)
  - ELW 상장 종목수 : 9,063개('10년) → 4,115개('13년)
  - 유동성공급자(LP) 수 : 28개사('10년) → 15개('13년)

#### □ 개선과제

- LP의 호가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
  - 15% 초과 호가제출 범위 축소, 호가 스프레드 8% 이격 조건 폐지
  - 거래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해 ELW 시장을 정상화 할 필요

---

1)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으로 예정된 시점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

## 4. 대체거래소(ATS)<sup>2)</sup> 1일 거래한도 상향

### ☐ 현황

-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키고, 거래 체결시간 및 거래수수료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체거래소(ATS) 설립이 가능해졌음(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, '13.8월)
- 정부는 ATS가 중요한 자본시장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래한도에 대해서도 규제
  - 하루 평균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의 5% 이하, 특정 종목 거래의 10% 이하
  - 시장점유율이 5%가 넘는 경우에는 정식거래소로 요건을 갖춰 인가 받아야 함
- 신규 ATS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 한국거래소 보다 거래수수료를 낮춰야 하고 거래 체결시간을 낮추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 투자에도 나서야 함

### ☐ 문제점

- 거래규모가 5%로 제한돼 있고 각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ATS 지분율도 15%에 불과해 사실상 기대수익이 미미함. 따라서 증권사가 ATS 운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, ATS 설립허용도 무색해졌음
-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ATS를 도입한 정책적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

### ☐ 개선과제

- ATS의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요청
  - 시장전체 거래량의 20%, 개별종목 거래량의 30% 수준

---

#### 2) ATS(Alternative Trading System)

-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 일부를 맡는 대체거래 시스템
- IPO, 시장감시 등 자율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오직 매매체결에만 특화

## 5. 신용생명보험, 신용손해보험의 대출창구 취급 허용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
  - \*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
-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신용생명보험<sup>3)</sup>, 신용손해보험 상품도 보험판매를 위한 전담창구에서 보험판매전문 직원 등에 의한 판매만 허용되고 있음

### ☐ 문제점

- 신용보험은 사망, 상해 등 보험사고 발생시 미상환 대출금 잔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대출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
- 그러나 보험상품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,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

### ☐ 개선과제

- 대출창구에서 신용보험 판매 허용
  - 신용보험에 한해 보험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 허용

---

3)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, 장애, 암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험사가 대출고객을 대신해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

## 6.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최소 유지비율(50%) 완화 및 역외지역 연락사무소 설치 허용

### ☐ 현황

-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·출장소(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·관리사무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)를 설치할 수 없음
  - \*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
- 또한 서울, 인천시, 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에서는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해야 함
  - \*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

### ☐ 문제점

- 영업구역 외에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50% 이내에서만 여신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제한이 많음
- 또한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간판 등을 달지 않는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구역 외의 여신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

### ☐ 개선과제

- 서울, 인천, 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에서는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 최소유지비율을 40%로 완화 요청
-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



## 7. 투자중개업자의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

### ☐ 현황

-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투자중개업<sup>4)</sup>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
  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2-15조
- 투자중개업자가 대외지급수단<sup>5)</sup> 매매 및 매매의 중개와 관련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‘고객 투자자금의 환전을 위한 것’으로 제한
  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2-15조 제3호

### ☐ 문제점

- 투자중개업자는 대외지급수단 매매의 중개 거래시마다 투자자금인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됨
- 또한 수시로 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외환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

### ☐ 개선과제

-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의 범위 확대
  - 외국환거래규정 제2-15조 제3호의 ‘고객 투자자금의 환전을 위한’ 문구 삭제

---

4)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·매수,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·채권의 발행·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

5)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  
- 정부지폐, 은행권, 주화, 수표, 환어음, 약속어음, 우편환, 신용장 등

## 8. 방카슈랑스 판매 25%를 완화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(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관)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보사 또는 1개 손보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 신규 상품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
  - \*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6항
- 현재 보험사들은 국내 시중은행과 방카슈랑스 판매제휴를 맺고 있으며,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%가 넘으면 상품판매를 중지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팔아 해당 상품의 비중을 줄여야 함

### ☐ 문제점

- 방카슈랑스 판매 25%률은 방카시장 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음
- 또한 25% 초과 판매 금지규정 준수를 위해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가 중단되는 등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음

### ☐ 개선과제

- 판매액 비중 확대 요청 (現 25% → 35%)

## 9.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

### ☐ 현황

-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·물품·편익 등(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·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·조화·화환 제외)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
- 또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, 제공내용, 제공일자 및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,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
  - \*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-18조,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 4
- 은행의 경우, 준법감시인이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출시 거래 상대방 성명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도록 하고, 개인 고객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기념품은 예외 항목으로 인정하는 등 일부 완화했음
- 그러나 증권, 자산운용, 선물 등 금융투자회사는 여전히 접대비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

### ☐ 문제점

- 저녁만찬의 경우, 두 사람이 식사하면 3만원은 쉽게 초과할 수 있음. 따라서 외부 고객과 만날 때에는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음
- 동일한 거래에 대해 기준 금액 이하로 분할 결제할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편법을 야기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미약함

### ☐ 개선과제

-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요청

## 10.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 완화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
\*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
- 카드모집인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발급 건수에 따라 수당을 제공받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

### ☐ 문제점

- 카드 연회비가 보통 1~2만원대임을 감안하면 1~2천원 이내의 경품만 제공해야 함
-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1천원대의 경품을 찾기도, 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움

### ☐ 개선과제

-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 완화
  -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한선을 높여줄 것 요청

## 11.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아웃소싱 제한 개선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·대리·중재·화해·청탁·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,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
\* 변호사법 제109조
- 현재 보험사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액이 정해져 별도의 합의 업무가 필요없는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대해서 외부 손해사정법인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아웃소싱하고 있음
- 그러나 보험액에 대한 합의 또는 법원판결을 거쳐야 하는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해당 보험사만이 합의 또는 화해를 할 수 있음
- 보험사가 아닌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 대인보상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

### ☐ 문제점

- 보험사는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사내 별도 조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있어 인건비, 관리비 등 사업비 절감이 어려우며, 이는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
### ☐ 개선과제

-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(보험업법상 특례조항 도입)

## 12.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

### ☐ 현황

-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'원화용도'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음('11.7월)
  - 원칙적으로 '원화용도'의 신규 외화차입 제한, 기존 차입금 만기 상환 유도
-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여전사별로 자금조달 구조,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해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였음
  - 총 차입금의 10% 이내, 자기자본의 50% 이내 등
  - \* 금융감독원 행정지도(외환총괄-00034, 11.7.7)

### ☐ 문제점

- 신설 여전사는 기존 외화차입이 없고 국내 위주로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어 기존 여전사에 비해 차입구조의 불균형이 심함
- 따라서 차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는데 기존 他 여전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현재 총외채 중 단기차입비중 감소, 외화 완충자산 증가 등 외화 건전성 지표가 지속 개선되어 규제의 효용성이 미미함

### ☐ 개선과제

- 외화차입 규제 완화 요청
  - 국내시장 의존도 완화, 차입선 다변화로 자금조달 구조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외신인도 제고 가능

### 13. 외화 자금차입 신고기준 금액 상향

#### ☐ 현황

- 현재 지자체, 공공기관, 영리법인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 (차입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)을 초과하여 외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
  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7-14조
-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외화 자금차입 신고기준이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 미화 5천만불임
  - \* 외국환거래규정 제2-5조

#### ☐ 문제점

- 차입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기준으로, 기준도 3천만불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대상이 됨
-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여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무역금융 지원이 절실한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
- 또한 외환관리 규정에 신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차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허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제한임

#### ☐ 개선과제

- 신고기준을 완화해 기업 요구에 탄력적 적용 요청

## 14. 은행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단축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예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채는 사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적용
  - \* 상법 제64조, 제487조
-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채 관련서류(현물채권, 신규신청서 등)를 10년간 별도 보관하고 있음

### ☐ 문제점

-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은행채와 그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남
  - \*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,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
- 은행은 채권을 상환 받은 후에도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
- 이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은행채에 대해서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역차별 받는 것임

### ☐ 개선 과제

- 은행채 상환청구권의 소멸기간 단축 요청
  - 원금 5년, 이자 3년



## 15.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

### ☐ 현황

-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
  - \*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
- 지방세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.
  - \* 지방세기본법 제74조 제1항

### ☐ 문제점

- 지자체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 제도가 기업의 현금 유동성 향상, 도난 위험성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기업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세 카드수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
- 그러나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1천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
### ☐ 개선과제

- 신용에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
  - 기업의 납세편익 도모

## 16. 장외파생상품 관련 은행 이중규제 개선

### ☐ 현황

- 자본시장법은 거래상대방이 ‘일반투자자’ 또는 ‘전문투자자’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보호제도를 두고 있고, 은행법에서는 ‘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가이드라인’에서 기업투자자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음
-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그 상대방을 기업상대방과 기관상대방으로 나누어 규정
  - \*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<별표15-2> 3. (용어의 정리) 라. 기업투자자’는 이하
  - \*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3. (용어의 정리)

### ☐ 문제점

-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겸영업무를 할 경우에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음
- 따라서 파생상품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사에 비해 영업환경이 불리하며, 은행의 파생상품업 발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

### ☐ 개선과제

- 은행법상 투자자구분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구분을 통일시켜 줄 것 요청

## 17. 투자자예탁금의 예금보험료 면제

### ☐ 현황

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(일시 보관중인 예수금)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함
  - \*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
- 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계·압류·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, 자사운용도 국고채 등 비위험 자산만 가능함
-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별도의 보험금도 납부해야 함
  - \* 예금 등 연평균잔액의 0.15% (30%의 비율범위에서 그 비율 인하 가능)
  - \*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

### ☐ 문제점

- 투자자예탁금은 전액이 강제로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전액 투자자보호가 되고 있으나 예보의 부보대상(예금보호 대상 예금)으로 편입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함

### ☐ 개선과제

-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면제 요청

## 18.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펀드 수시공시를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,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등 3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
  - \*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

### ☐ 문제점

- 전자우편은 다수의 고객들이 스팸메일로 간주하고 있고 본점 등에 책자를 비치해 게시하는 경우, 실제 자료를 찾아보는 고객이 거의 없어 공시 효과가 낮은 것이 현실임
- 법령상 게시 기간 기준도 없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해 실무상 업무 혼선 초래

### ☐ 개선과제

-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기본으로 하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자우편 수신을 통하여 공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
-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지정 요청

## 19. 대형 보험대리점 책임 부여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그 임직원·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(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)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적으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\* 변호사법 제102조

- 다만,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
### ☐ 문제점

- 배상 부담능력이 충분한 보험 대리점의 경우에도 부실판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
- 따라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보험사기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

### ☐ 개선과제

- 부실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여하도록 요청

## 20. 보험사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

### ☐ 현황

-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%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,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음
  - \* 보험업 제2조
- 또한 보험회사가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%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
  - \* 보험업 제109조
- 우리나라의 자회사 규제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임
  - 미국 :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
  - 일본 : 주식 총수의 50%를 초과한 수량 또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

### ☐ 문제점

- 금융이 글로벌화, 대형화 되는 환경속에서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자회사 설립 또는 자본 제휴를 통해 신규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
- 그러나 보험사의 경우 자회사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금융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
- 국내 상법 등에서 자회사 기준을 50%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에도 자회사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함

### ☐ 개선과제

-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자회사의 범위를 해당 회사 주식 50% 초과 소유한 경우로 변경 요청